

HEADLINE NEWS

‘도로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조례 개혁안 마련 (뉴욕)

미국 뉴욕시는 매년 보도 및 차도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관련 손해배상금 액수가 2001년도에 5억 달러에 이르는 등 최근 급격히 증가하자, 현행 배상 관련 조례를 전면 재검토해 종합적인 개혁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혁안의 골자는 도로결함으로 인한 사고시 과거에는市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손해를 배상했으나, 이제는 사고관련 당사자들의 책임을 따져 책임질 부분만市에서 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당사자들이 책임지도록 하자는 데 있다.

이번 개혁안은 2가지의 주요한 조례 개정안을 담고 있다. 첫째, 빌딩소유주가 빌딩 앞의 보도를 제대로 보수하지 않았거나, 눈을 제대로 치우지 않아 발생하게 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은 빌딩소유주에게 있다고 개정했다. 이전의 조례에는 빌딩소유주가 보도 관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상 책임은市에 있었다. 둘째, 도로결함 발생시 결함상태에 대한 정확한 보고를 의무화했다. 현재市는 도로 결함 조사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 업체들이 도로결함에 대한 부정확한 보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市는 위탁받은 업체들이 결함 위치와 상태 및 정도를 자세히 보고하도록 의무화했으며, 거짓보고는 범죄행위로 간주했다.

(www.nyc.gov/html/om/html/2002a/pr107-02.html)

HIGHLIGHTS

도시관리

- ① 용적률의 잉여분을 주변지역으로 이전 허용 (동경)
- ② 고층건물이 건립된 급경사지 안전관리시책 시행 (홍콩)
- ③ 도시하천을 明・淸 시대의 원래 모습으로 복원 (북경)

도시환경

- ④ 환경영향평가기준 대폭 완화해 도심내 민간개발 촉진 (동경)
- ⑤ 건설폐기물 리사이클 민관 공동으로 강력 추진 (동경)

도시교통

- ⑥ 승객수송량이 기존 2층버스의 2배인 ‘벤디버스’ 운행 (런던)
- ⑦ 효율적 버스운영을 위한 「대중교통통제센터」 설치 (미네아폴리스)
- ⑧ 하나의 스마트카드로 모든 대중교통 이용 (애틀랜타)

사회복지

- ⑨ 노인에게 보조금 지원 위한 「Quickcheck」 시스템 구축 (뉴욕)

행.재정

- ⑩ 시민 및 관광산업 지원을 위한 뮤직 페스티벌 '개최 (시카고)
- ⑪ 都廳・도서관・지하철 등 공공공간에 무선 LAN구축 (동경)
- ⑫ 상수도사업의 아웃소싱 확대 추진 (동경)
- ⑬ 우체국에서 각종 증명서 발급 대행 (일본・하나마키市)

① 용적률의 잉여분을 주변지역으로 이전 허용 (동경)

일본 東京都 도시계획심의회는 최근 ‘잉여용적률’을 주변 지역으로 이전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東京驛 역사(驛舎)의 ‘잉여용적률’을 주변에 짓는 빌딩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都는 東京驛 주변에 위치한 마루노우치 역사(驛舎)의 보존·복원과 역앞 광장의 정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규정상 허용된 용적률인 900%를 다 활용하지 못하고 $\frac{1}{3}$ 정도만 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都는 ‘남은 용적률’을 오오테마치, 마루노우치, 유락쿠마치 등지의 개축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심의회는 東京驛 남쪽에 지하 자유통로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북쪽에만 자유통로가 있어서 이용자가 불편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아에스 지하도와 營團 지하철 마루노우치線의 東京驛 지하광장을 연결하는 지하도는 길이 약 340m, 폭은 12m이다. (日本經濟新聞, 5. 31)

② 고층건물이 건립된 급경사지 안전관리시책 시행 (홍콩)

평지가 부족한 홍콩은 해안 매립과 함께 가파른 경사지를 적극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홍콩이 고층건물들을 급경사지에 건립하고 수많은 절개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전을 유지하고 있는 데에는 면밀한 경사지 안전관리시책이 큰 몫을 하고 있다. 현재 홍콩은 ‘홍콩의 경사지 안전(Hong Kong Slope Safety)’이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해 경사지의 안전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홍콩은 市에서 행하는 안전점검 및 관리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경사지의 안전에 관심을 갖고 이상징후를 감지할 수 있도록 일반시민을 위한 ‘경사지 안전관리 매뉴얼’을 별도로 작성해 제공하고 있다. 이 매뉴얼은 각종 사진 및 비디오 클립을 통해 이상징후에 대한 다양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시민들이 이상징후를 발견했을 때 신속하게 市에 알릴 수 있도록 핫라인을 설치해 놓고 있으며, 경사지안전 전문가 명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수시로 안전 점검에 관해 도움을 받도록 하고 있다. (hkss.ced.gov.hk/hkss/eng/index.htm)

③ 도시하천을 明·淸 시대의 원래 모습으로 복원 (북경)

중국 北京市는 2005년까지 도시하천을 明·淸 시대의 원래 모습으로 복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市는 이미 南環狀水系 정비를 끝내고, 올해는 北環狀水系 정비를 착수한다. 복환상수계는 北京의 시가지를 통과하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4개의 강과 2개의 호수로 구성된 수역으로, 유역 면적은 약 100km²이다. 이 정비사업에는 복개하천을 정비해 수면을 노출시키는 사업과, 정체수역을 준설해 수계 전체를 배가 운항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포함된다.

이 사업이 완료되는 2005년에는 北京 시가지의 수계가 명·청 시대의 원래 모습을 되찾고, 세계의 내륙 도시 중에서 유례 없는 환상수계 경관을 형성하게 될 전망이다. 市는 복환상수계 정비사업을 통해 北京의 수역면적이 증대됨으로써 공기의 습도가 높아지고, 녹지면적이 증가함으로써 도시의 기온이 내려가는 등 도시 기후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민망 일본어판, 4. 1) (차이나 넷, 4. 1)

④ 환경영향평가기준 대폭 완화해 도심내 민간개발 촉진 (동경)

일본 東京都는 도심내 민간개발 촉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대폭 개정키로 했다. 都는 현재 환경영향평가 의무대상인 건축물 높이가 100m이고 연면적이 10만m² 이상인 것을 1.5배(150m, 15만m²) 정도로 완화할 예정이다. 이는 고층화가 바람직한 지역에서 민간부분의 고층빌딩 건설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층건축물로서 의무대상인 사업은 현재 약 40건인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약 1/3 정도가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재생법에 근거하는 ‘도시재생 긴급정비지역’과 도시계획상 고층건축물 건설을 장려하고 있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실시 전에 작성하는 조사계획서 제출 절차가 생략되고, 19개인 평가항목이 10개 항목 이하로 줄고, 평가기간은 현행 약 20개월에서 약 9개월로 단축된다. ‘특정지역’은 마루노우치·히비야 등의 도심부 및 신주쿠 등의 7부도심 등지에 있는 고층주택 유도지역이다. 都는 이 개정안을 6월중으로 都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日本經濟新聞, 5. 29) (東京新聞, 6. 4)

5 건설폐기물 리사이클 민간 공동으로 강력 추진 (동경)

일본에서는 지난 5월 30일 「건설자재 리사이클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지자체와 관련업계의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건설자재 리사이클법」은 건물의 신·개축 공사시 현장에서부터 배출되는 폐콘크리트(폐철근콘크리트 포함), 폐아스팔트, 폐목재의 3개 품목에 대해 공사 수주자(受注者)에게 분별 해체와 재이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공사 발주자는 분별해체 공사의 계획서를 사전에 유출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3개 품목의 리사이클 비율을 2010년도까지 95%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설폐기물 리사이클 움직임은 민간 공히 의욕적이다. 東京都內 주택시공업체인 ‘住友林業’은 폐목재를 연료로 재생하는 국내 18개사와 제휴해 재이용을 촉진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또한, 東京都에서는 폐콘크리트를 재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이 모색되고 있다. 그동안 폐콘크리트 재이용의 주(主)가 된 노반재 수요가 공공공사 감소에 따라 함께 줄어들어 따라 새로운 용도를 찾게 된 것이다. 都는 올 봄에 都営주택 재건축 공사를 건설폐기물 리사이클추진 모델사업으로 선정, 폐콘크리트 등의 폐기물을 현장 내에서 가능한한 재이용하는 방법을 모색중에 있으며, 한 건설업체는 재건축 현장에서 폐콘크리트를 가열·특수 가공해 공사현장에서 전량 재이용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대형 건설업체들은 공동으로 가와사키 임해부에 건설폐기물의 리사이클 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들 업체들은 이 시설을 통해 건설 오니(汚泥)를 노반재(도로나 철로의 기반이 되는 지반을 다지는 자재) 등으로 재생함으로써 「건설자재 리사이클법」 상으로 리사이클 의무대상이 아닌 오니 등의 재이용을 업계 주도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들 업체들은 민간공장부지를 임차해 리사이클 시설을 설치하고, 이 시설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나온 오니를 소성(燒成)해 노반재 등으로 재생할 계획이다. 또한 종이, 나뭇가지 및 목재, 폐플라스틱 등으로 구성된 혼합폐기물은 소성용 연료로 사용한다. 오니와 혼합폐기물은 리사이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업계의 자율적인 재활용 프로젝트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日本經濟新聞, 5. 18 / 5. 28)

6 승객수송량이 기존 2층버스의 2배인 ‘벤디버스’ 운행 (런던)

총 18m 길이의 ‘벤디(Bendy) 버스’가 지난 6월 5일 영국 런던의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으로 등장했다(사진 참조). 첫 번째 운행지역은 런던에서 가장 혼잡한 워털루-빅토리아-런던브리지 노선이다. 총 140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는 ‘벤디버스’는 승객수송 면에서 기존 이층버스(Double Decker)의 2배에 달한다.

‘벤디버스’는 계단이 없고 바닥이 낮아 노약자와 장애인의 접근을 용이하게 했다. 또한, 자동 온도조절장치와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운행 효율을 높이기 위해 승객들이 버스요금을 정기권 또는 노상자동판매기



(Roadside Machine)를 통해 지불토록 했다. 市는 ‘벤디버스’가 짧은 시간에 보다 많은 승객들을 수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www.bbc.co.uk/london)

7 효율적 버스운영을 위한 「대중교통통제센터」 설치 (미네아폴리스)

미국 미네아폴리스 대중교통 운영당국은 최근에 건립한 「대중교통통제센터」를 금년 말부터 운영해 버스의 정시운행을 도모하고, 돌발사고 및 고장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운행중인 버스와 센터간에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신기기 및 GPS를 이용한 차량위치정보시스템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또한, 교통순찰차량에도 이러한 시스템을 설치해 버스에서의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설치 예정인 또 다른 시스템은 버스운행시간정보와 각 정류장별 승하차 횟수 및 승객 수를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구축된 자료는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한 버스운행시간표 작성에 활용될 예정이다.

(www.metrocouncil.org/transit/news/Stories/05_02hightech.htm)

8] 하나의 스마트카드로 모든 대중교통 이용 (애틀랜타)

미국 애틀랜타 대도시권 교통계획기구인 'Georgia Regional Transportation Authority'는 하나의 스마트카드로 애틀랜타 대도시권내의 모든 대중교통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스마트카드 도입의 목적은 이용편의 증진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운영기관간의 요금정산 문제를 용이하게 하는 데 있다.

현재, 대중교통 환승시 '환승승차권'을 발부해 환승에 따른 추가요금을 무료화 하고 있지만,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아 비효율적인 요금정산이 이루어져 왔다. 이 계획의 추진을 위해 현재 관련기관간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다.

(www.zwire.com/site/news.cfm?newsid=4216336&BRD=1099&PAG=461&dept_id=99012&rfi=6)

9] 노인에게 보조금 지원 위한 「Quickcheck」 시스템 구축 (뉴욕)

미국 뉴욕시는 노인들이市나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자택에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인터넷상에 「Quickcheck」 시스템을 구축했다. 현재 뉴욕시에는 노인들을 위한 18가지의 보조금 프로그램이 있는데, 노인들은 어떤 프로그램이 자신에게 해당되는지 잘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을 방문해 많은 서류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뉴욕시가 이번에 구축한 「Quickcheck」 시스템은 이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한 One-stop 서비스로서, 노인들이 자택에서 인터넷을 통해 어떤 보조금 프로그램이 자신에게 해당되는지 객관식 문답에 의해 금방 체크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보조금 지원신청을 인터넷상으로도 할 수 있다.市노인복지부서는 신청서와 데이터뱅크에 보관된 신청자 데이터를 기초로 해 보조금 지급가능 여부를 파악한 뒤 보조금지원기관에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보낸다. 그리고 신청자에게는 추가서류 등을 해당기관에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며, 담당자가 직접 신청자의 자택을 방문해 도움을 주기도 한다. (www.nyc.gov/html/om/html/2002a/pr115-02.html)

미국 시카고市는 올 여름 'Music Everywhere'를 주제로 정하고, 도시 어디에서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市문화과와 관광과가 함께 주관하는 이 행사는 5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열리는데, 콘서트홀이나 옥외무대 뿐 아니라 길거리, 광장, 공원, 호텔로비, 쇼핑몰에서도 음악을 들을 수 있다. 또한, 거리에서 함께 노래하기, 호숫가 페스티벌 등의 행사도 개최된다. 시민들을 위해 기획된 이번 행사는 관광산업을 지원하려는 목적도 있다. 행사기간 동안 시카고를 방문하는 관광객들 일부에게는 호텔숙박요금을 특별 할인해 주거나, 뮤직이벤트 참가티켓을 제공하기도 한다.

(www.ci.chi.il.us/Mayor/2002Press/news_press_musicthissummer.html)

都廳·도서관·지하철 등 공공공간에 무선 LAN 구축 (동경)

일본 東京都는 都청사, 都立도서관, 都営지하철 등의 공공스페이스에 고속으로 접속할 수 있는 무선 LAN(구내 정보통신망)을 구축,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都는 우선, 都청사의 로비 및 전망대, 都立중앙도서관, 都営지하철 역 등 10군데를 대상으로 6월 중순부터 약 3개월간 무선 LAN을 시험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민간통신사업자 약 20개사가 이 시범사업 참가를 신청했으며, 都는 앙케트 조사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다.

都立도서관은 무선 LAN에 접속할 카드를 무료로 이용자들에게 빌려줘 PC만 있으면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무선 LAN 시스템은 손쉽게 고속대용량(Broadband) 통신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며, 광섬유 등의 고속통신 회선이 부설되어 있는 지점에 기지국을 설치한다. 이용자는 LAN 카드를 PC 및 PDA(휴대정보단말기)에 꽂아 이용한다. 일본에서는 외식업체를 중심으로 무선 LAN 상용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日本經濟新聞, 5. 23)

상수도사업의 아웃소싱 확대 추진 (동경)

일본 東京都는 수도사업을 대상으로 민간기업으로의 아웃소싱을 확대할 방침이다. 都는 2003년부터 요금 중간정산 업무를 전면적으로 외부에 위탁하고, 방대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 누수점검업무도 점차적으로 외부에 위탁할 계획이다. 요금 중간정산 업무는 그동안 주말에 한해 민간기업에 위탁해 왔지만, 내년부터는 평일에도 외부에 위탁할 계획이다. 고액의 인건비가 소요되는 누수점검의 경우, 금년에는 100억엔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외부위탁을 추진해 경비를 절감할 예정이다. 都는 그동안 수도 관련 업무의 외부위탁을 적극 추진한 결과, 1976년도에 약 7,900명이었던 수도국 직원이 현재는 약 5,300명으로 감소했다. (日本經濟新聞, 5. 31)

우체국에서 각종 증명서 발급 대행 (일본: 하나마키市)

일본 이와테縣 하나마키市는 지난 6월 3일부터 지자체가 담당하던 각종 증명서 발급 업무를 시내 우체국에 위탁 시행하고 있다. 시민들이 각 지역 우체국에서 주민표 및 인감증명서 등 증명서의 교부 신청을 하면, 그 자리에서 즉시 교부해주고 있다. 이는 2001년 12월부터 시행된 「우정(郵政) 관청법」에 근거하고 있다. 6월 3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 곳은 시내 총 13개 우체국 중 市중심부로 부터 비교적 멀리 떨어진 8개 우체국이다. 이곳에서는 주민표 사본을 비롯, 호적 등본·초본, 납세 증명서 등 市시민과 창구에서 맡아하던 거의 모든 종류의 증명서를 교부한다.

시민들이 각 증명서에 대한 청구서를 우체국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우체국은 이 청구서를 市시민과에 팩스로 송신하고, 市시민과에서는 증명서를 우체국으로 송신해 이를 시민들에게 배부해준다. 우체국에서의 발급시간도 市시민과 창구와 비슷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이 없다. 市는 1회 청구시 168엔의 수수료를 우체국에 지불하기로 했으며, 2002년 예산에 팩스설치비용과 수수료 등으로 약 600만엔을 편성했다. (가호쿠신보, 6. 4)